

약가제도 ‘신약 혁신 보상’ 강화 R&D 투자 연동 약가체계 도입

정부, 약가제도 새판짜기 본격화
신약 중심 개편안 기대·우려 교차
제네릭 약가 40%로 인하 가능성
업계, 산업 성장동력 약화 우려도

오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 혁신 신약개발(R&D) 활성화와 신약 접근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 속에 제약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가치 평가와 신약 보상체계 간 균형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약가제도는 신약과 필수약 접근성 개선, 높은 약품비 부담 축소, 제약 업계 내 혁신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 하향 조정, 계단식 약가제, 사용량 비례 약가인하 연동제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 체계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산 신약 창출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제약 업계에서도 신약개발(R&D)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약가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 개량 신약 등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는 균형 잡힌 제도의 필요성도 촉구한다.

우선 정부는 ‘R&D 투자 비율에 연동된 약가보상체계’를 도입해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가 의약품에 대한 기존 위험분담계약(RSA)을 보완한 ‘약가유연계약제’가 도입될 예



사라진 전세 매물

26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앞에 전월세 안내문이 텅 비어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58.5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162.2)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뉴시스

정이다. 이 제도는 이중약가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표시 약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표시 약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0% 수준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약가인하 기조가 강화될 경우 중소 제약사 중심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등 제약 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 만성질환 치료는 장기 복용을 요구하고 이 중 상당수는 제네릭 의약품이 처방된다”며 “고

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 현대인의 일상 속 만성질환 급증 등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제네릭은 비용 절감 차원보다는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구성 요소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구개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상을 실제 기업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약 중심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국산 신약이라도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 부회장단 전원 용퇴 창사 이래 최대 인적 쇄신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
바이오 각자대표에 신유열

그들의 양대 축인 화학과 유통에서 동반 부진을 겪고 있는 롯데가 ‘부회장단 전원 용퇴’와 ‘CEO 30% 교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롯데그룹은 26일 롯데지주를 포함한 36개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1면>

이번 인사는 비상경영 상황 속 터너라운드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개편과 인적 쇄신에 중점을 뒀다. 롯데지주를 실무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계열사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CEO의 3분의 1인 20명을 교체하는 등 고강도 쇄신을 단행했다.

롯데지주는 고정욱 사장과 노준형 사장을 공동대표이사로 내정하며 실무형 조직으로 거듭난다. 고정욱 사장은 재무와 경영관리를, 노준형 사장은 전략과 기획을 맡는다.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에는 최영준 전무, 경영혁신실장에는 황민재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한 롯데는 지난 9년간 유지한 사업총괄 체제를 폐지하고 계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다만 롯데화학군은 HQ를 폐지하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PS



O(Portfolio Strategy Office)로 조직을 변경해 운영한다.

이번 인사에서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이영구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김상현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등 부회장단 전원이 용퇴하며 세대교체를 알렸다.

박두환 롯데지주 HR혁신실장은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롯데GRS를 이끌었던 차우철 대표는 사장 승진과 함께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주요 계열사 CEO도 대폭 교체됐다.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이사에는 정현석 부사장이 내정됐다. 정 부사장은 1975년생으로 롯데백화점 역대 최연소 대표이사다. 롯데윌푸드 대표이사에는 서정호 부사장이, 롯데건설 대표이사에는 오일근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롯데e커머스 대표에는 추대식 전무가 선임됐다.

신유열 부사장(사진)은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를 맡아 바이오사업을 지휘하며 역할이 확대됐다. 또한 롯데지주에 신설되는 전략컨트롤 조직에서도 중책을 맡는다.

<4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

급물살 타는 석유화학 구조조정 롯데·HD현대 대산 NCC 통합

롯데케미칼 물적분할 새법인
HD현대케미칼과 합병 추진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양사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을 결정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이후 나온 첫 사업재편 사례다.

<관련기사 3면>

두 회사는 현재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연 110만톤)과 HD현대케미칼(연 85만톤)의 NCC를 각각 운영하고 통합 시 최대 110만톤의 설비 감축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와 업계가 약속한 NCC 감축 목표(270만~370만 t)의 약 30% 수준이

다. 업계에서는 HD현대케미칼의 비교적 최신 설비를 중심으로 가동하고, 노후 설비의 가동률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통합 방식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해 신설법인을 만들고, 이 신설법인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구조다. 합병 후 존속 법인은 HD현대케미칼이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합병법인의 지분을 최종 50%씩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도 완료했다.

NCC 사업은 최근 에틸렌 스프레드가 톤당 200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손익 분기점(250~300달러)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동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통합 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와 정유-석화 수직계열화 강화로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

200억弗 對美투자 전담 특별기금·공사 신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안 국회 제출
자동차 관세 11월 1일자 소급 적용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연간 2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과 공사 조직이 신설된다. 양국 관세 합의에 따른 후속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이를 운영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근거 등을 담았다.

우선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산업통

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절차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요청을 받은 운영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이재명 대통령, 동포 오찬 간담회서 재외국민들의 투표소 문제 해결 약속
▲나경원 “민주당, 1년 내내 계엄팔이·내란몰이… 그만 우려먹어야”
/사진 뉴시스

▲정청래 “‘윤 어게인’ 외치는 옹호세력에 누가 마음 열어주겠나”
▲국힘, 창원서李 정권 규탄 대회… 장동혁 “이재명 아웃, 괴물정권 끝내야”

▲조국, 당대표 취임 일성 ‘개헌·주거권 보장’檢 개혁은 언급 안해
▲與, 연평도 포격전 15주기 맞아 “어떤 경우에도 北도발 용납 않을 것”